

‘AI·남미’ 성과 안고 돌아온李 대통령… 지지율·증시 시험대

기업 9500억달러 투자 협력 등 결실
국정수행 긍정평가 3주 연속 하락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 재개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부동산, 증시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귀국 당일인 이날 관련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 내외와 참모진을 태운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는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브라질리아·상파울루,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공지능(AI) 서밋’에 참석해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와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고, 한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 9500억달러 투자 협력을 이뤄냈다. 또 남미에서는 핵심 광물·에너지 협력



미국·남미·독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을 확대하며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했다. 아울러 2억8000만 규모 시장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주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귀국한 이 대통령이 마주한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진행해 이날 발표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5.9%였다. 이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1.0%p 오른 50.5%로 같은 조사상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부동산과 증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여당 내홍 심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중남미 순방 성과가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귀국 당일 오

후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곧 발표될 부동산 정책과 최근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 상황 등 국내 현안이 주요 의제였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 하락률은 34% 수준으로, 1990년 이후 역대 1위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이날 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도 핵심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직전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후속 토론회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 보유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또 이 대통령은 4일부터 이틀간 부처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첫날인 4일에는 오후 2시~3시40분까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청, 기후에너지부(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후 4시20분부터 6시까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한다.

5일에는 오전 10시~11시40분에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가, 오후 2시~3시40분까지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가 보고에 나선다. 마지막 순서인 오후 4시20분부터 6시까지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보고가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4~5일 일정은 당시 마치지 못한 나머지 부·처·청·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다. 이번에도 생중계로 진행되며,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도 할 예정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2일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전지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대표 후보. /뉴시스

정청래 앞섰지만 김민석 추격·선호투표 변수

민주당 전대 순회경선서 각 1승
호남·수도권 표심 ‘승부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말 순회경선이 과반 득표자 없이 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 대표 후보가 각각 1승씩 주고받은 채 끝났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은 채 선거가 흘러갈 경우, 선호투표제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당원들이 많은 호남권과 수도권 표심에 눈길이 쏠린다.

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결과를 종합하면, 정 후보는 충청·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누적 투표수 12만1981표 중 5만5518표(45.51%)를, 김 후보는 5만4307표(44.52%)를 득표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99%포인트(p)에 불과하다. 송영길 후보는 1만2156표(9.97%)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기준으로는 일단 정청래 후보가 1위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고,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는 1%p 이내다. 아울러 전날(2일) 부울경 지역에선 정 후보가, 지난 1일 충청권에선 김 후보가 이긴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과반 득표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대표를 선출할 때 과반을 얻어야 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실시한다. 유권자가 후보 3명을 선호순으로 고른다. 그리고 3위 후보가 떨어지면 3위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2순위로 찍은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한다.

이 때문에 선호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사실상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김 후보를 1순위로 고르는 유권자가 2순위로 송 후보를 고르고, 송 후보를 고르는 유권자는 2순위로 김 후보를 고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친청(친정청래)계에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결국 당원의 대다수가 몰려 있는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 투표권을 보유한 관리당원이 30% 이상 밀집돼 있고, 수도권에도 대략 40% 정도가 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져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성향이 강한 편이다. /서예진 기자

與 “국민 위한 사법개혁” vs 野 “법치 붕괴”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국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촉구
민주, 형소법 개정 국민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관리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량채 분수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니,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인)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대통령답게 처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법안(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은 검찰 개혁이 끝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자리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에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서영교 위원장과 김승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조직과 인력·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는 독립적으로 기소는 책임 있게, 그리고 각 기관이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검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다. 기준과 달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들어있다”며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수사는 사법 경찰관 즉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수청은 한국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수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고 덧붙였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다. 검사가 긴급할 때 (보완수사)를 3일 내로 해주세요” 하면 3일 내로 실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증거보전에 대해서는 ‘범죄현장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 등에는 바다를 달고 한 곳·한 사건·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키스)에 시간별로 넣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놨다’고 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